

전남 내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없어 '초비상'

신규 사업 70여개 발굴 했지만
긴축재정에 국비 확보 위기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
공장 신설 등 기업유치도 어려워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남 SOC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쟁길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무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 안됐다"=박정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26일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 회의에 참석, "내년도 추진할 70여개 신규 사업이 하나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8082억) 조성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을 건의하는 등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선 상태다.

박 부지사는 이날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정책 회의 마지막에서야 "기획재정부 여건이 좋지 않다. 전년보다 재정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쓸 것을 호소했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제출된 각 부처 예산안을 토대로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진행하고 8월 초까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와 2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박 부지사는 "나도 앞으로 5차례 기재부를 찾아 설명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9일까지 사실상 정부 예산안 심의가 종료되는 만큼 정책 실무부서에서도 꼭 한번씩 기획재정부 예산담당부서를 찾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해



편백나무 아래 '더위 탈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시민들이 기온이 상승하기 전에 광주 북구 중외공원 편백나무 산책로를 찾아 아침 운동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율이 부진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 자제, 신규 예산 전면 재검토 등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다. 관련 예산을 쟁길 국회의원조차 기재위 등 상임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내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정부 예산안 문턱을 넘지 못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공장·중설 가능, 전남 투자 유치 암울=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지방 투자 유치를 이끌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가 최근 마련해 공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복귀기업에도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전남으로의 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남도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도 입법예고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기업 및 유턴기업의 투

자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전남도 별도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분양률 80% 미만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공했던 입지보조금도 분양률과 상관없이 제공키로 했다. 해상풍력단지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연구소 이전, 신·증설 시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 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방투자 유치가 심화되면서 타 시·도에 대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재정지원 등 기업 유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투자유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선 8기 광주전남상생위
오늘 전남 도청서 첫 개최
반도체특화단지 등 과제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오늘(2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갖는다. 이미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확인한만큼 분위기는 민선 7기보다 나은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야당으로 전락한 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각종 현안·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이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 성과를 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사·도 각 실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특화단지 등 신규 과제 11건, 공공항 이전 등 현안 과제 3건,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등 추진중인 과제 26건 등 모두 40건의 과제를 협의한다. 일단 신규 과제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과대학 설립,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우리살 소비 촉진 협력, 관광브랜드사업 상호 협력 추진 등이다. 11개 과제는 대부분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해오던 사업이지만, 특별지방자치체 설립은 이번 회의에서 첫 등장했다. 특별지방체는 자치행정상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데, 공공항 이전이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등 시·도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안 과제에 포함된 광주 공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진행이 멈춘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화산동북면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도 현안에 포함됐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별도 실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어 제외됐다.

이 밖에도 현재 추진중인 초광역협력사업 5건과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4건,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관련 5건, 공항관련 협력 2건, 무등산 및 영산강 보전 2건, 관광 협력사업 2건, 국립산비탈관연구소 건립 등 기타 6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사로 재구성한 시험지 해킹 사건 전말 ▶6면

신 팔도명물 - 폭염엔 영양 만점 비단장어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

사상 최초 전남 예산 11조원 시대 개막!
2022년 국고예산 8조원 돌파!
역대 최대 SOC 국가계획반영 쾌거!

